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59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어 (1999.6),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 현재 본부(2부문 2실 5부 2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6지점 6센터)에 임원 3명, 정규직 440명, 기간제 156명을 포함해 599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0.8.18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현 원(명)	443	3	440	156	156	599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사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부실 발생 시 채무자를 대신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구상권 관리, 안정적 보증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관리 등이 있음.

다.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서울시 출연금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보증공급액	12,416	12,368	13,372	18,780	47,623	30,000
보증잔액 (A)	36,709	37,030	37,971	42,377	78,000	90,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465	381	397	633	2,130	1,399
서울시	190	65	48	66	810	633
정 부	0	-	-	-	43	0
자치구	5	6	4	3	59	22
금융회사법정출연	75	55	43	41	50	8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195	255	302	523	1,168	664
당기순손실	343	346	228	397	1,752	9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4	8	2	-	-
기본재산(B)	5,942	5,973	6,150	6,388	6,766	7,200
운용배수=(A/B)	6.18	6.20	6.17	6.63	11.52	12.5

주1)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차액분)

2) 2020년 당기손실과 기본재산은 추정액임.

- 2020년 본예산에서는 재단의 적정 운용배수(6.3배) 유지를 위해 90억원을 출연했으나,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천 5백 만원을 증액하였음.

< 2020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3회 추경예산
9,000	12,665 (+3,665)	62,665 (+50,000)	80,965 (+18,300)

- 2021년 출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 등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최소 운용배수(12.5배)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633억원을 편성할 계획임.
-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하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취약계층의 경영악화와 생존위기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증잔액 9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 (15배)²⁾ 내에서의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해 내년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경영부담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음.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코로나19 특별보증 시행 관련 수입감소분 보전의 적절성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증가하면서 생존위기에 처하자 8천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특례보증(금리 1.0%~1.8%)을 실시하고, 기준보증료 1% 이하³⁾의 상품을 확대했음.
- 기준보증료율은 연 1%로 해당상품에 따라 보증료 0.5%부터 최고 2% (재도전지원 특례보증)까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 현황 〉

(2020.09.01. 기준)

지원대상	금리	보증료율	보증비율	보증한도
확진 피해기업	연1.0%	연0.5%	100%	5억원
직접 피해기업	연1.5%	연0.5%	3천만원 이하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간접 피해기업	연1.8%	연0.8%	3천만원 초과 95%	시중은행협력자금 7천만원

- 이에 2021년도 출연금에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료 수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임.
- 올해 8월 현재 코로나19 특별보증 실행건수는 17,005건으로 평균 보증료율은 0.61%로, 확진 또는 직접피해기업 수입감소분 보전에

3) 보증료 0.5% 상품: ▶ 서울형 골목상권119 긴급자금 특별보증,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특별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 서울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82억원⁴⁾과, 간접피해기업 수입감소분 보전에 18억원⁵⁾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특별보증 시행 관련 수입감소분 보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확진	직접피해	간접피해
기금직접융자	145,000	540	89,655	54,805
시중은행협력자금	655,000	2,000	418,000	235,000
합계	800,000	2,540	507,655	289,805

※ 보증공급금액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및 추세에 따라 산출

- 보증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재산 잠식으로 이어져 운용배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보증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마.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적절성

-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였음.
- 이후 올해 초 정책연구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고 정책연구 수행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업무를 추가하였음.

4) 확진 또는 직접피해기업: 5,102억원 x 0.5%p x 3.2년(총 5년 보증 중 분할상환에 따른 실제 보증료 부담기간) = 82억원

5) 간접피해기업: 2,898억원 x 0.2%p x 3.2년(총 5년 보증 중 분할상환에 따른 실제 보증료 부담기간) = 18억원

- 또한 데이터인프라팀을 신설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교류·가공을 통해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 정책연구센터 조직 개편 전·후〉

2019년 6월 개소 시	2020년 1월 조직 개편 후
정책연구팀 (3명) (2개 팀으로 분화)	정책연구 1팀 (4명)
상권분석팀 (3명)	정책연구 2팀 (7명)
(신 설)	상권분석팀 (3명)
	데이터인프라팀 (4명)

- 이러한 조직개편에 맞춰 2021년도 센터 예산은 전년대비 44.2%(9억 2천만원) 증가한 30억원을 출연금에 편성하였음.
- 인건비는 27.9%(3억 8천만원) 증가한 17억 4천만원(임금인상률 1.5% 적용), 운영경비는 75.0%(5억 4천만원) 증가한 12억 6천만원임.

〈 소상공인지원정책연구센터 예산 현황 〉

(2020.08.31. 기준, 단위 : 원)

구분	2020년	2021년 (안)	증가율 (%)
총액	20억 8천만원	30억원	44.2
세부	○ 인건비 : 13억 6천만원 - 전문연구원 인건비 : 12억 · 정규직(10명) : 5억 8천만원 · 개방형(10명) : 6억 2천만원 - 복리비, 보험료 등 : 1억 6천만원	○ 인건비 : 17억 4천만원 - 전문연구원 인건비 : 15억 6천만원 · 정규직(10명) : 6억 7천만원 · 개방형(10명) : 8억 9천만원 - 복리비, 보험료 등 : 1억 8천만원	27.9
	○ 운영경비 : 7억 2천만원	○ 운영경비 : 12억 6천만원	75.0

※ 2021년 전문연구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 예상인상률 1.5% 적용에 따른 산출

- 한편 8월말 현재 센터의 예산집행률은 인건비 36.5% 운영경비 11.2%이며, 연도 말 예상집행률은 인건비 78.4%, 운영경비 114.4%로 전망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지연(신규 13명, 7개월)과 퇴사자·휴직자 등으로 인한 예상 근무기간 축소, 서울시 수행용역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종합지원사업 고도화 등의 사업이 연도 말에 집중됨에 따라 항목별 예산편성과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2020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예산 집행 현황 >

(2020.08.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8.31.		12.31.(추정)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총 액	2,080	577	27.7%	1,894	91.1%
인건비	1,360	496	36.5%	1,070	78.4%
경비	720	81	11.2%	824	114.4%

- 그러나 내년은 센터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해야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운영비 출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바. 종합의견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 우려로 인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수출감소, 경제활동 침체 등 본격적인 경기 하방위험이 대두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 취약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센터조직의 확대에 앞서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분석과 적정 연구 인력에 대한 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재의 연구조직 운영에 대폭적인 출연금 증가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